

한·중·일 FTA 추진현황 및 의의

편집실

1. 한·중·일 FTA 추진 배경

- 동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추진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힘을 얻지 못하였지만, 동아시아의 많은 인구 및 자원에 한국과 일본의 기술이 어우러진다면 어느 지역협력체에 못지않은 상호이익은 물론 3국 모두 국제적인 무역대국이며, 경제규모, 인구, 투자 비중 등이 높아 FTA 체결 시 상당한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상에서 출발.
- 특히 현재까지 지역협력의 미비로 시장장벽이 비교적 높고, 무역자유화 속도가 느려 역내 성장잠재력 및 교역 잠재력이 제약되고 있음을 인식.
- 중국의 노동력, 한국의 상품개발 능력, 일본의 고급기술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이 가능하여 상호간에 경쟁보다는 협력의 여지가 많음.
-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로 수평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세안에 비해 한국과 일본 협력이 더 많은 수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 1994년 체결된 NAFTA의 성공적인 지역협력 사례를 통해 강대국과 개도국 간 경제협력의 상호이익 증명되었으며, FTA로 인한 개도국과 강대국의 종속관계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었음.

2. 한·중·일 FTA 추진 현황

- 1998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기업인 회의에서 동북아 3국간 FTA체결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처음 제안.

- 1999년 11월 마닐라 한·중·일 3국 정상 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함을 표시하면서부터 한·중·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함.
-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 동북아 3국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설정 및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
- 2000년 12월 2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경제, 통상 등 비정치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주요 관심사를 논의.
- 2001년 11월 브루나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경제장관 회의 신설, 비즈니스 포럼 창설, 외교장관회의 신설, 문화·인적 교류 및 IT 공조체제의 강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본격적인 경제 협력 추진의 기틀을 다짐.
-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안. 2003년부터 3국의 국책연구기관, 즉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총합연구개발기구(NIRA)가 공동연구에 들어감.
-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다섯 번째 만남을 가진 한·중·일 3국의 정상은 경제, 안보,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한 14개 분야에 대해 정상회담을 갖고 이들 분야에 대한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첫 공동선언문을 발표.

- 2013년 3월 26~28일 서울에서 1차 협상, 1차 협상내용은 FTA 논의 체계,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논의.

3. 한·중·일 FTA를 위한 3국간의 선행과제

한·중·일 FTA는 3국간의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역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후생 증대의 혜택을 나누어 가지는 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사실임.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경제적인 측면을 이익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 장기적인 목표를 경제, 정치, 행정에 이르는 대규모 통합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두어야 할 것임. 그렇기 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적 격차, 상호신뢰, 남북한 대치관계 등 동북아 지역에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함.

3국이 동북아 경제 통합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만 함. 3국은 관세 양허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져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폐쇄적인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그뿐 아니라, 비 경제분야의 협력, 즉 문화, 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상호 공존하기 위한 국민적 동조를 이끌어 내야 함.

4. 한국에서 바라본 한·중·일 교역변화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한·중·일 FTA 실현 시기를 우리나라의 중요한 양자간 FTA가

마무리된 다음으로 본다면, 한·중·일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채소, 과일, 육류 등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동식물 검역 등이 관세정정보다 더 강하게 교역을 제한하는 요인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FTA로 인한 교역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식물검역에 의한 교역제한이 풀려있는 경우가 많아 동북아시아 역내 교역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한·중·일 FTA로 인한 양념 채소류의 교역 변화는 중국의 대한민국 및 대일본 수출등대로 나 타날 전망이다.

○ 한·중 FTA

- 교역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 : 곡물류와 양념채소류.
- 쌀, 대두, 보리, 잡곡류(팥, 녹두 등), 참깨.
- 고추, 마늘, 양파는 국내 생산규모가 크고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며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아 매우 민감한 품목임.
- 그러나 식물검역 규정에 의한 교역 제한 조치를 고려하면 중단기적으로는 수입가능성이 낮음.

○ 한·일 FTA

- 교역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 : 돼지고기
- 한·일양국은 대부분 곡물을 대량 수입하고 있어 양국의 쌀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낮으나 양국 간의 교역은 가능함.
- 계절적 수요, 선물용 수용 등으로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일부 과일(사과, 배 등)과 녹차, 낙농품 등은 민감함 품목임.
-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기대가 높음.

- 관세철폐로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품목은 돼지고기임. 일본의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수입 제한효과가 높은 차액관세 형태임.

5. 농업부문 FTA추진방향

① 교역원활화 추진

- 민감한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예외로 하면서도 역내 시장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기준을 조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문제를 다루어 나갈 적절한 기구를 역내에 설치함으로써 시장 통합의 기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②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국민건강 위협요인, 위해병해충의 유입 및 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

- 연개 식품안전 시스템의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가 간 육류 및 생축의 이동이 가능토록 생산이력시스템에 대한 표준 및 정보교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SPS, Codex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및 식품생산 및 교역을 위한 협력이 요구됨.

③ 보완관계의 발전

-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및 농업발전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
- 보존자원 집약도, 품목별 특화에 있어서 보완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함.

④ 농업분야의 협력강화

- 기술협력, 인적교류, 유전자원교류, 저장, 가공,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협력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일본에서 바라본 한·중·일 FTA 영향분석

오쿠다 사토루(奥田 聡)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FTA 확충에 힘쓰는 북동아시아

전세계가 무역자유화를 위해 최적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WTO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때, 각국은 그 대신에 자유무역네트워크를 전제로 FTA(자유무역협정)를 확충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한중일 3국에서는 무역입국을 표방하는 한국이 한·미 FTA를 타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큰 중·일 양국의 움직임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0년에 들어 중·일 양국의 FTA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